



2021. 1.

2021년도 주요업무계획



재난안전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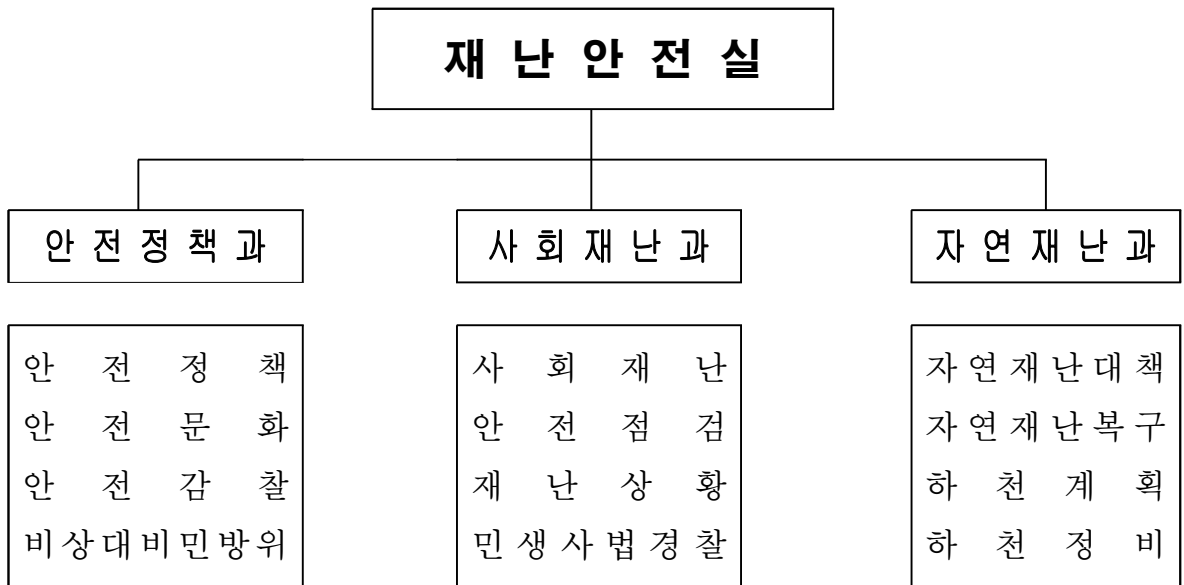
목 차

I . 일반현황	1
1. 조직 및 예산 / 1	
2. 과별 사무분장 / 2	
II . '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	3
III . '21년 비전과 추진전략	4
IV . 전략목표 추진계획	5
1.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안전관리 기반 강화 / 5	
2. 선제적 사회재난 예방관리로 안전충복 실현 / 10	
3. 한발앞선 자연재난 대처 및 하천관리로 도민안전 구현 / 15	
V . 주요 현안사업	20
VI .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	24
VII . 건의·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현황	25

I. 일반 현황

1. 조직 및 예산

□ 기 구 - 3과 12팀



□ 정 원

구 분	정 원	정무직	일반직	연구직	소방직	별정직	임기제
계	74		73		1		
안전정책과	25		25				
사회재난과	24		23		1		
자연재난과	25		25				

□ 예산현황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예 산 액	사업예산		행정운영경비	
		사업예산	비율	행정운영경비	비율
계	419,778	419,552	99.95 %	226	0.05 %
안전정책과	1,564	1,468	93.8%	96	6.2%
사회재난과	1,861	1,800	96.7%	61	3.3%
자연재난과	416,353	416,284	99.9%	69	0.1%

2. 과별 사무분장

■ 안전정책과

-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·조정
- 재난관리평가 추진 및 도민안전보험제도 운영
- 도민안전종합대책 수립·시행
- 안전문화운동 추진 및 활성화
- 안전감찰계획 수립·추진 및 안전분야 부패방지 업무 총괄
- 충무계획 수립·조정, 통합방위협의회 운영, 비상대비 훈련
- 민방위 경보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

■ 사회재난과

- 사회재난 대책의 수립, 조정, 대비, 대응·수습 총괄
- 재난대응 종합훈련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
- 시설물 안전관리, 안전진단·점검 등 위해요소 해소
- 재난상황관리 및 전파, 재난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
- 민생안전 6대 분야(식품·환경·원산지·축산위생·청소년·공중위생) 단속·수사

■ 자연재난과

- 자연재난 대책 수립, 홍보, 대비·대응 등 상황관리
- 자연재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
- 재해복구사업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 총괄
- 지방하천 기본계획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
- 수해예방을 위한 지방하천 및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추진

Ⅱ. '20년도 성과평가 및 시사점

1. 성과평가

도민이 중심이 되는 안전정책 추진

- '20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(국무총리 표창 및 특교세 5억원)
- '20년 국민안전교육추진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
- 도민안전보험 운영으로 도민 안전망 마련(보험금 지급 56건/760백만원)
- 안전충북 실현을 위한 선제적 예방감찰 및 민방위 경보시설 보강

사회재난의 신속한 전파로 대응체계 구축

-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한 도내 감염 확산 차단('20.1.30.~)
- 민·관 참여 전문적 안전점검으로 재난취약요인 선제적 제거(14개소)
- 코로나19, 태풍 등 재난안전 및 위험상황 긴급재난문자 신속전파(1,076건)
- 민생 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 및 기획수사 추진(24회, 31건)

도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

- 폭염, 태풍,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사전대비로 피해 최소화
 - 상황판단회의(25회), 재난안전대책본부(13회) 운영, 재해취약지역 수시점검 등 실시
- 집중호우(7.28~8.11)시 신속한 조사 및 복구계획으로 조기 생활 안정화
 - 피해액(2,497억원), 복구액(6,985억원), 특별재난지역 선포(충주, 제천, 영동, 음성, 단양, 옥천(군북군서), 진천(진천백곡), 괴산(청천))
- 재해예방 및 위험요인 해소 등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 추진
 - 예방사업(86지구, 950억원), 지방하천정비(31지구, 755억원), 다목적저수지 건설(3지구, 142억원)

2. 시사점

대형화재, 코로나19·아프리카돼지열병, 미세먼지 등의 사회재난 및 규모가 더욱 커지고 빈발해지는 자연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필요

- ➔ 재난유형별·현장중심의 재난대응 훈련 강화 및 재난취약시설 사전 예찰·점검 등 인명·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태세 확립

안전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요구 증대 및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재난안전교육 필요성 제기

- ➔ 온라인 교육, VR(가상현실) 체험 등 교육방식의 변화 및 안전취약 계층에 대한 적극적 배려

Ⅲ. '21년 비전과 추진전략

비
전

도민이 행복한 안전 총복 실현



— 3대 전략목표 12개 이행과제 —

전 략	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안전관리 기반 강화	선제적 사회재난 예방 관리로 안전총복 실현	한발 앞선 자연재난 대처 및 하천관리로 도민안전 구현
이 행 과 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②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 ③ 안전감찰 체계 확립으로 안전분야 반부패 환경 조성 ④ 도민 안전보장을 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선제적·상시적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 ②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도민 생활안전 구현 ③ 재난상황 신속 전파로 초동 대응체계 확립 ④ 불공정한 위법행위 근절로 법질서 확립 추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한발 앞선 상황관리 및 예방체계 구축 ② 선제적 재해예방사업 추진 및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③ 환경과 치수를 고려한 체계적인 하천계획 추진 ④ 안전하고 아름다운 하천 유지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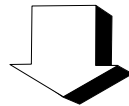
IV. 전략목표 추진계획

전략목표 1 - 안전정책과

1. 도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안전관리 기반 강화

여 건

- 재난의 대형화, 복합재난의 위험 증가, 새로운 유형의 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관리정책의 총괄·조정 등 안전관리체계 강화 필요
 - 도민 스스로 재난·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안전교육 시행 및 민관협력 체계 확대를 통한 안전문화 수준 향상 도모 필요
 - 현장중심의 생활밀착형 안전감찰을 통하여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시키고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안전한 충북 구현
 -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와 다양하고 복합적인 국가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전방위적 비상대비 태세 확립 필요
- ➔ **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발굴과 추진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조성**



이 행 과 제

- 1**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
- 2**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
- 3** 안전감찰 체계 확립으로 안전분야 반부패 환경 조성
- 4** 도민 안전보장을 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

1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

□ 안전관리기능 강화를 통한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

-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(47개 유형)
 - 사회·자연재난 등 재난사고 유형별 대책 수립 및 상·하반기 실적 관리
- 안전관리 정책의 총괄·심의를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
 - 2021년 안전관리계획,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심의 등
- 2021년 재난관리평가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을 위한 대응 철저

□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 기반 구축

- 안전위해 요소 경감을 통한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(6개 분야)
 - 지역안전지수 향상 계획 수립 및 분야별 담당부서 추진상황 점검
- 도민 안전보험 운영으로 사회안전망 혜택 제공 **공약**
 - 폭발·화재·농기계·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등 10항목
- 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사업 등 소방안전교부세 효율적 운영

□ 소통과 참여 확대를 통한 안전행정 구현

- 안전정책 공유 및 협업을 위한 도·시군 안전정책협력협의회 운영
- 재난안전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가 참여 확대
 - 충북재난안전문화포럼 및 충북안전정책위원회 운영 등
- 도민 안전을 위한 재난안전 예보제(매월) 및 정보서비스 제공

□ 재난안전연구센터 연구 및 정책개발 등 내실 운영

- 지역수요 맞춤형 재난안전 정책연구 수행(5~8개 과제)
- 충북 재난 세부유형별 재난안전캘린더 제작·배부 **신규**
 - 자연재난(태풍, 폭설, 폭염 등), 사회재난(화재, 교통사고, 감염병 등) 통계·분석 등
- 지역안전지수(6개 분야)에 대한 도민 재난안전인식 조사 **신규**
 - 6개 분야 : 화재, 교통사고, 자살, 범죄, 감염병, 생활안전

2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운동 전개

□ 민관협력 체계구축을 통한 도민안전 종합대책 추진

- 민·관·단체 참여 도민안전 종합대책 설명회 개최(4월)
-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 성과보고회 및 총회 개최(11월)

□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 전개

- 도민 참여형 안전문화운동 추진
 - 시기별, 계절별 맞춤 테마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(12회)
- 도민 생활 밀착형 안전문화운동 추진
 - 대중교통(시내버스) 안전캠페인 및 재난 대응 행동요령 책자 보급
 - 어린이 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그리기·글짓기 공모전(9월)
-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용품 제작 및 배부(마스크외 4종)

□ 맞춤형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프로그램 강화

- 재난안전 체험마당 운영(11개 시·군)
 - 교육용 가상현실(VR) 장비 활용 재난안전체험교육
- 생애주기별 안전취약계층 안전문화교육 추진
 - 화상교육 등 방역수칙 준수 및 소 그룹별 교육 실시(130회)
- 노인대학과 연계한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추진 신규
 - 어르신 교통안전수칙 교육 및 안전신분증 보급(1,200여명)

□ 재난안전 사고예방 중심의 안전 활동 확대

- 안전보안관 활성화로 생활 속 안전문화의식 확산
 - 주민신고제 및 안전캠페인, 안전타운위칭 활동 등
- 일상생활 속 안전위험요소 「안전신문고」 신고 활성화
 - 안전보안관,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신고 활성화 및 안전신문고 포상제(11월) 운영
- 안전분야 종사자 역량강화 시·군 순회교육(11회)

3 안전감찰 체계 확립으로 안전분야 반부패 환경조성

□ 안전부패 척결을 위한 재난관리책임기관 감찰 강화

- 재난·안전분야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 감찰
 - 시설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추진 실태 등
 - 대상기관 : 4개 시·군(청주, 영동, 진천, 단양) / 상·하반기 2개소
-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국가안전대진단·재난대응 실태 감찰
 - 대설, 해빙기, 풍수해 등 재난상황에 대한 현장 가동실태 등
- 건설, 문화, 여가시설 등 분야별 안전조치 이행사항 점검
 - 안전감찰(19년~20년) 실시 20개 분야 지적사항 이행실태

□ 생활밀착형 안전취약분야 수시 안전감찰

-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 안전감찰
 -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안전취약분야(생활안전, 시설안전 등) 밀착감찰
 - 다중이용시설·안전취약시설 등 안전사각지대 발굴
- 중앙부처와 연계하여 재난취약분야 안전감찰 협업 추진
 - 행정안전부 반부패협의회 중점과제 합동감찰
 - 행정안전부 및 중앙부처 협업과제 추진(상·하반기)

□ 안전분야 반부패 협의회 운영으로 감시체계 확대

- 충청북도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·실무협의회 개최
 - 구성기관 : 도, 교육청, 시군, 지방공사·공단 등
 - 구성인원 및 개최 : 20명 내외, 연 1회 이상
- 안전분야 부패 근절을 위한 분야별 중점과제 선정·감찰

4 **도민 안전보장을 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**

□ 민·관·군·경 협업체계 확립을 통한 통합방위태세 강화

-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운영(4회)
- 지역방위작전 수행능력 강화를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(3억원)
- 주민신고망 운영 활성화로 지역 안보태세 확립(11,841개망)

□ 실전적 비상대비 훈련으로 위기관리 역량 제고

-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을지태극연습, 충무·화랑훈련 실시
- 분야별 비상사태 대비 실효성 있는 충무계획 수립(25개 분야)
- 주민과 함께하는 민방위 날 훈련 실시(7회)

□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 및 동원자원 효율적 관리

- 비상사태시 신속 대응을 위한 민방위대 편성(3,425개대/103천명)
- 민방위대원 체계적인 교육훈련 실시로 현장 대응능력 향상(99천명)
- 민방위 시설·장비 점검으로 대응역량 제고(시설 670개소/장비 6종, 10,784점)
- 국가동원태세 유지를 위한 인적·물적 동원자원조사 실시

□ 신속·명확한 민방위경보 전달체계 구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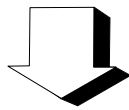
- 경보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경보단말기 설치(4개소/160백만원)
- 상시 민방위 경보상황 유지관리와 신속한 경보전달체계 확립
 - 경보전파 다중이용시설 관리(92개소)
 - 전국단위 민방위 경보발령 점검훈련(12회)
 - 24시간 경보상황관리 및 민방위 경보시설 정기점검(12회)
 - 주민 생활안전 예방 안내방송(호우, 산사태, 산불, 폭염 안내 등)

2. 선제적 사회재난 예방관리로 안전충북 실현

여 건

- 예측불가하고, 복잡·다양한 사회재난 지속 증가에 따라 선제적 예방 체계 확립 및 상시 재난대응태세 구축 필요
-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난취약요인 제거를 위한 전문적·선제적·상시적인 안전점검 대응체계 요구
- 재난 발생시 신속·정확한 상황전파 등 초동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연중 24시간 실시간 상황관리 추진
- 민생사범 불공정한 위법행위 근절로 도민이 안심하는 소비문화와 생활환경 조성

➔ **선제적 예방 체계 확립과 Non-Stop 재난관리 체계 구축으로 도민이 행복한 안전충북 실현**



이 행 과 제

- 1 선제적·상시적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**
- 2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도민 생활안전 구현**
- 3 재난상황 신속 전파로 초동 대응체계 확립**
- 4 불공정한 위법행위 근절로 법질서 확립 추진**

1 선제적·상시적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

□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상시 대응 체계 구축

-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·운영(감염병·구제역·AI 등)
-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추진(12개소) 신규
-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대응역량 강화 추진
 - 매뉴얼 작성훈련 실태 점검 및 민간전문가 맞춤형 현장 컨설팅 등
-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·보완
- 지반침하 대응방안 강구 등 안전관리체계 확립
 -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및 체계적 안전관리

□ 재난대응훈련 내실화로 실전 대응 역량 강화

- 도민참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(1회)
 - 도민 체감형 훈련 강화 및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등
- 재난관리자원 공동 활용 재난대응 훈련(5회)
 - 실전대응 재난대비 자원이동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훈련
-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(984명)
 - 도·시군 재난관리 부서장 및 재난안전 분야 담당자 등

□ 재난안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수습·지원 체계 구축

- 재난관리자원시스템 DB 현행화 및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
 - 재난상황 대비 장비·자재 및 인력현황 현행화 등 관리 강화
- 충청북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운영 내실화
 - 협조체계 구축(평상시) 및 자원동원, 피해복구 지원 등(재난시)
- 재난심리회복지원 사업 활성화
 -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 상담, 찾아가는 심리회복지원 센터 운영 등

2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한 도민 생활안전 구현

□ 민관이 함께하는 안전점검 체계 구축

- 도민과 함께하는 국가안전대진단 실시
 - 안전취약 시설에 대한 위험요인 사전 발굴 개선
- 시기별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
 - 설·추석 명절, 해빙기, 봄·가을 행락철, 취약분야 등 특별점검
- 대규모 지역 축제 및 행사장 사전 안전점검 실시

□ 재난취약요인 사전제거를 통한 선제적 안전관리 추진

- 시설물 안전법의 주요 시설물(1.2.3종) 안전관리·점검체계 확립
 - 시기별 안전점검·진단 등 관리주체 주요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 지도
- 실효성 있는 재난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문단 운영
 - 기술사, 교수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(20명) 합동 안전점검 및 자문
- 유도선 및 수상레저 사업장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

□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점검 체계 강화

-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추진(6~8월)
 - 전담 T/F팀 운영, 안전요원 배치, 안전장비 확충, 안전수칙 홍보
-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강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공간 확보
-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리로 사회안전망 강화
 - 음식점, 숙박업, 터미널, 주유소, 장례식장 등 12개 업종
-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(신규, 변경) 및 관리

3 재난상황 신속 전파로 초동 대응체계 확립

□ 365일 상시 재난상황 관리체계 유지

-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관리로 선제적 대응태세 확립
 - 2인 1조, 3교대(상시근무), 특정시기(명절 등) 근무 강화
- 재난지역 위험상황 각종 시스템을 통한 신속 전파
 - 재난상황 문자알림(12,327명), 긴급재난문자(CBS) 등
- 각종 재난 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
 - 재난수습 주관부서에 신속한 전파, 초동대응체계 확립

□ 상황전파 능력배양을 위한 훈련 강화

- 행정안전부 주관 도, 시·군 합동 상황 접수·전파·보고 훈련(분기)
 - 훈련메시지 수신, 긴급재난문자(CBS)송출, 재난상황보고 훈련
- 도 주관 시·군 상황전파 및 보고 신속처리 숙달훈련(매월)
 - 훈련메시지 수신, 긴급재난문자(CBS)송출, 재난상황보고 훈련

□ 재난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

- 재난상황 운영 통신장비 장애 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실시
 - 상황전파시스템(NDMS), 긴급통신장비, 영상통합관제 등
- 재난상황(사회·자연재난 등) 대비 영상회의시스템 지원(수시)
-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에 따른 단말기(휴대형) 구입(10대) **신규**
 - 재난현장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여 신속 대응

4 불공정한 위법행위 근절로 법질서 확립 추진

□ 도민 건강생활 위해사범 근절을 위한 단속·수사 강화

- 중점분야 관리대상별 불법행위 정기 집중단속 수사(8회)
 - 민생사범 대응 지역여건 감안한 현장중심 단속·수사
- 사회적 이슈, 불법행위 선제적 기획단속 수사(12회)
 - 범죄첩보, 민원제보 등 위법개연성 높은 민감한 사안 단속·수사

□ 민생사범 대응 위한 유관기관 협업 및 감시 활동 강화

- 검·경, 식약처, 농·수품원 등 합동 수사 공조체제 강화
 - 협의회, 워크숍, 간담회 및 유관기관 공조수사(6회)
- 단속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보수집 및 증거확보 강화(4회)
 - 원산지 검정, 위해식품 감정 의뢰 및 환경오염물질 분석 등

□ 범죄예방 수사 활동 홍보 강화 및 수사기반 확보

- 사전예방 위한 수사 활동 홍보 및 단속 적발·처분사례 게시
 -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, 범죄사실·수사결과 도 홈페이지 게시
- 단속·수사 기동성 확보 및 불법행위 정보수집 강화
 - 수사차량(1대) 임차 및 현장증거 수사장비 확보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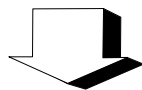
□ 특사경 수사 활동 전문성 강화 및 업무수행 수사역량 배양

- 수사능력 배양 실무교육(50명) 및 역량강화 직무연찬회(1회) 실시
 - 집합교육(중앙, 자체) 및 직무연찬회(업무유공 포상) 등
- 특별사법경찰 수사 사례집 제작(125부)
 - 유관기관 자료수집, 다양한 범죄수사 업무수행 지침서 제작·배포

3. 한발 앞선 자연재난 대처 및 하천관리로 도민안전 구현

여 건

-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, 폭염, 가뭄, 태풍, 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 필요
 - 현장 중심의 자연재난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역량을 강화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
 - 환경과 치수를 고려한 체계적인 하천계획수립 및 정비로 도민 행복과 안전 도모
- 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자연재난 대처로 도민 안전망 구축과 안정적인 하천관리 지속 추진



이행과제

- 1 한발 앞선 상황관리 및 예방체계 구축
- 2 선제적 재해예방사업 추진 및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
- 3 환경과 치수를 고려한 체계적인 하천계획 추진
- 4 안전하고 아름다운 하천 유지관리

1 한발 앞선 상황관리 및 예방체제 구축

□ 자연재난 상시 대응체제 유지

- 계절별 자연재난 대책기간 연중 운영
 - 여름철 호우, 태풍 등(5.15~10.15), 겨울철 폭설, 한파 등(11.15.~익년 3.15.)
- 예비특보 단계부터 비상근무체제로 전환 대응(선제적 상황관리)
 -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·운영

□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한 선제적 예방 조치

-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·운영 : 143개소
- 재난 예·경보시설 기반 확충 및 운영 : 574개소
- 재해저감시설 등 예방 중심의 선제적 재난관리기금 운용 : 72억원
- 자연재해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
-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알림 시스템 구축·운영 신규

□ 재난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방재 역량 강화

- 재난분야 담당자 방재교육 실시로 안전의식 확산 : 120명/1회
- 자연재난 유형별 표준행동매뉴얼 제작·배포 : 150부
- 자연재난 예방 도민행동요령 등 홍보물 제작·배포 : 7,000부

□ 민간협력 재난현장 대응체제 구축

- 지역자율방재단과 재난 예방 대응 협조체제 강화
 - 지역별 특화훈련으로 전문성 강화 : 4개 분야 11개반/4,181명
- 지역자율방재단원 방재전문교육 실시(40명)
- 민·관합동 자연재난 유형별 대응훈련(풍수해, 지진대피 등)

2 선제적 재해예방사업 추진 및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

□ 재해예방사업 지속 추진으로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

-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: 37지구, 720억원
-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: 8지구, 368억원
-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: 20지구, 148억원
- 재해위험지역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: 26지구, 90억원 **신규**
-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: 11지구, 37억원

□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방재정책 추진

- 중장기적 방재정책 추진을 위한 시·군별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
- 폭염대비 행동요령 홍보 및 저감시설 설치로 피해 최소화 추진
-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교육·홍보 지속 실시
- 주민안전 확보를 위한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지속 추진
- 침수 피해 예방 및 대피 활용을 위한 침수흔적도 작성

□ 피해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

- 충청북도 피해조사지원단 조기 가동으로 신속한 피해조사 실시
 - 재해 종료 날부터 10일간(사유시설), 7일간(공공시설)
- 라이프라인 (전기, 수도, 가스 등) 최우선 응급복구 추진
 - 재해 발생시 주민불편 시설 신속한 복구지원
- 재난지원금 선 지급으로 피해자 조기 생활안정 도모

3 환경과 치수를 고려한 체계적인 하천계획 추진

치수·이수의 합리적인 체계구축을 위한 하천기본계획 수립

- 지방하천 기본계획 재수립 : 2개소 23.7km, 12억원
-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운영 : 1회
- 하천기본계획 친수지구 설정 협의회 운영 : 2건

치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하천관리

- 기본계획 적정성 검토를 위한 자문단 운영 : 4회
-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협의회 운영 : 3건
 - 개별사업 선정 및 설계단계에서 협의를 통해 체계적 추진
-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: 4개소

지역별 하천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정비

- 지방하천 정비사업 : 29지구 24.0km, 737억원
- 충청북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종합계획 수립
- 하천정비사업 준공시 「인계인수협의회」 운영 : 5건

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하천구역 조정

-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하천구역 변경 : 8개소
- 불합리한 하천구역 조정으로 민원해소 : 수시

4 안전하고 아름다운 하천 유지관리

□ 재해 예방을 위한 내실있는 하천 유지관리

- 소하천 정비사업 : 41지구 31km, 631억원
 - ※ 전체 2,038지구 3,647km, 58,795억원
- 호우피해 하천 재해복구사업 : 343개소, 2,809억원
 - 지방하천 : 96개소, 48.5km, 892억원
 - 소 하 천 : 247개소, 132.7km, 1,917억원
-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 : 100개소 신규
- 소하천 홍수 모니터링 시설(자동유량계측시설) 설치 : 6개소
- 홍수피해 경감을 위한 소하천 상류 재해경감시설 설치 : 6개소
-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: 4지구 5.7km, 11억원(소교세)

□ 자연재난에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한 하천 조성

- 하천 유지관리 사업 : 174개소 2,315km, 136억원
 - 국가하천 : 6개소 442km, 121억원
 - 지방하천 : 168개소 1,873km, 15억원
- 하천관리 상황 정기점검 및 평가 : 연 2회
-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활성화
 -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시 전문가 심의

□ 도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장기적 하천 기능 보전

- 지방하천 사유재산 편입토지 보상 : 6,914천㎡, 924억원
 - '21년 : 98필지 70천㎡, 13억원
- 하천사용료 징수 : 11개 시·군, 17억원

V. 주요 현안사업

현안사업 1 : 도민 안전보험 운영

□ 필요성

-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·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
- 안전보험 제도를 도민에게 널리 알려 보험 혜택 높이기 위한 차별화 홍보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 1월 (가입일로부터 1년)
- 사업대상 : 충북도민 전체
- 가입항목 : 10개 항목

①폭발·화재·붕괴 상해사망 ②폭발·화재·붕괴 상해후유장해 ③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④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⑤강도상해사망 ⑥강도 상해후유장해 ⑦자연재해사망 ⑧스쿨존 교통사고부상 치료비 ⑨농기계사고 상해사망 ⑩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(※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 중복 보장)

- 가입방법 : 개개인 별도 가입절차 없이 사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
- 사업비 : 691,203천원(도비 253,357천원, 시군비 437,846천원)
 - * 보험 가입 : 1,637,081명('20. 7.기준)×410원(10항목 평균 단가) ≒ 671,203천원
 - * 보험 홍보 : 20,000천원(라디오 홍보, 옥외전광판 광고, 리플릿 제작 배부 등)
- 사업내용
 - 도민이 예상치 못한 사고·재난·범죄 등으로 사망을 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
 - 라디오, 리플릿, 옥외전광판 등을 활용한 안전보험 보장내용 등 홍보

□ 향후계획

- 도민안전보험 지급대상자 조사 및 지급현황 파악 : '21. 1.~ 12월
- 도민안전보험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 : '21. 2.~ 10월

현안사업 2 :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추진

□ 필 요 성

-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재난 대응 역량 강화
- 민·관이 함께하는 체감형 훈련을 통한 실전능력 제고 등 도민 안전문화 의식 확산

※ 근거법령 :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35조(재난대비훈련)

□ 사업개요

- 기 간 : '21. 1. ~ 12월 ※ 훈련기간 미정
- 대 상 : 도 및 11개 시군
- 훈련방법 : 토론기반훈련, 현장기반훈련
 - 토론기반 : 상황판단회의 및 도·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훈련
 - 현장기반 : 재난상황발생시 인력·장비 투입 및 수습·복구 활동 등 실전 현장 훈련 실시
- 주요내용
 - 재난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 및 협업기능별 대응체계 등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전반 종합훈련 실시
 - 재난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대형화재·지진 대피훈련
 - 도민, 민간기업 등 참여 활성화 및 현장 체감형 훈련 추진

□ 향후계획

- 행안부 기본계획 통보 및 관계기관 설명회 : '21. 2. ~ 5월
 - ※ 2021년 행안부 안전훈련 기본계획에 따라 자체계획 수립 추진

현안사업 3 :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

□ 필 요 성

- 범정부 차원의 대대적 안전점검 등 사회적 안전운동 추진
- 안전취약 시설에 대한 관리실태 진단, 위험요인 사전 발굴·개선

□ 추진개요

- 기 간 : '21. 2. 22. ~ 4. 23. (2개월) ※ 코로나19 관련 잠정연기 중
- 대 상 : 2,688개소(재난취약분야, 국민관심분야)
- 점검방법 : 점검대상 시설 전체 합동점검

□ 주요내용

- 재난예방을 위한 핵심시설 위주 점검대상 선정으로 실효성 강화
-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결과 평가(시도+시군)
- 다중이용시설 자율점검·게시(27개 업종)
-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단 구성·운영(7개 단체)

□ 향후계획

- 민·관 협의체 간담회
- 국가안전대진단 준비·중간보고회
- 국가안전대진단 평가(행안부)

현안사업 4 : '20.7.28~8.11 호우 피해복구 추진

□ 피해 및 복구현황

- 피해액 : 2,497억원 (사유시설 323, 공공시설 2,174)
 - 인명피해 : 12명 (사망 7, 실종 1, 부상 4) * 이재민 903세대 1,810명
 - 사유시설 : 주택 895동, 농경지 1,267ha 등
 - 공공시설 : 도로 193개소, 하천·소하천 593개소, 산사태 450개소, 소규모 953개소, 수리시설 123개소, 철도 26개소 등
- 복구액 : 6,985억원 (국비 5,503, 도비 827, 시군비 655)
 - 시설별 : 재난지원금 393, 도로 1,081, 하천·소하천 3,127, 소규모 397, 수리시설 282, 산림청 831, 기타 874
 - 재원별 현황 (단위:억원)

구분	계	재원별			비고
		국고	도비	시군비	
총계	6,985	5,504	826	655	
국고 추가	-	1,735	△902	△833	특별재난지역
재난지원금	393	272	58	63	
공공 시설	6,592	3,497	1,670	1,425	

※ 특별재난지역: (시군) 충주, 제천, 영동, 음성, 단양 / (읍면) 옥천(군북, 군서), 진천(진천, 백곡), 괴산(청천)

□ 복구사업 추진

- 재해복구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현장중심 T/F팀을 구성·운영
- 재해복구사업 중점관리로 주민불편해소 및 재발 피해 방지
 - 설계단계부터 중점관리, 사전심의 등 행정절차 신속 추진
 - 부진사업장 현장점검 및 부진사유 분석·지원

□ 향후계획

- 우기 전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* 사업규모에 따라 2~3년 소요

Ⅵ. 5분 자유발언 후속조치 사항

발언의원	소 속	건설환경소방위원회	발언일자	'20. 09. 03.
	성 명	박우양 의원	관리번호	385-01-01
발언제목	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피해지원 대책 마련			
소관부서	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(환경산림국 수자원관리과)			
발언요지 (제안사항)	<p>○ 「용담댐 방류로 인한 수해 피해지역 국가차원의 신속한 지원 필요」</p> <p>- 집중호우로 인한 용담댐 방류 피해지역에 대한 주민 보상 등 실질적인 지원과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이 국가차원에서 마련 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주문함</p>			
추진상황	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계획</p> <p>금번 용담댐 방류에 따른 피해복구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(영동) 및 「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」에 따라 공공·사유시설 복구 지원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추진실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7.28~8.11 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 전액 지급(옥천 750백만원, 영동 1,182백만원) ○ 7.28~8.11 호우 시 용담댐방류로 인한 하류지역(영동, 옥천 등)의 피해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3항제9호에 “댐 방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비” 조항 신설 개정 법률안 발의 <p>* 박덕흠 의원 외 11인 (2020.8.12.)</p> <p>⇒ ‘댐 방류로 인한 피해’ 발생 시 제66조제1항에 의거 자연재난이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으로 판명될 경우, 현행법에 의해서도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, 조문 신설하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심사 의견으로 제382회 국회(정기회) 제9차에서 회의결과 대안반영 폐기됨.(2020.9.24.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향후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댐 방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 			
진 도	완 료(), 추진중(○), 검토중(), 조치불가()			
과장 음치현(☎220-2450) 팀장 박종완(☎220-2461) 담당자 이일준(☎220-2465)				

VII. 건의·결의문 채택 사후 추진상황

제 목	‘용담댐 대형댐 방류로 인한 피해지역 대책 마련 촉구’ 건의문		
채택일	제385회(‘20.9.16.)	관리번호	11-385-01
소관상임위	건설환경소방위원회		
소관부서	재난안전실 자연재난과 (환경산림국 수자원관리과)		
건의(결의)처	청와대, 국회의장,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, 국무총리실, 행정안전부 장관, 환경부장관, 한국수자원공사		
건의·결의 주요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‘댐관리 조사위원회’ 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철저히 조사 요청 ○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의 충청권 이전 검토 및 피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물관리 대책 마련 ○ 피해자들 피해보상 및 항구대책 우선 추진 ○ 한국수자원공사는 평상 시 철저한 댐수위 조절로 기후 변화로 인한 급격한 댐 방류로 하류지역 피해가 없도록 충북도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○ 국회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」의 조속한 통과와 시행으로 피해지역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 바람 		
관련 현안(문제) 사업 추진상황 및 도 대응현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금번 용담댐 방류에 따른 피해복구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(영동) 및 「자연재난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지침」에 따라 공공·사유시설 복구 지원 ○ 7.28~8.11 호우 시 용담댐방류로 인한 하류지역(영동, 옥천 등)의 피해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3항제9호에 “댐 방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비” 조항 신설 개정 법률안 발의 * 박덕흠 의원 외 11인 (2020.8.12.) ⇒ 제382회 국회(정기회) 제9차에서 회의결과 대안반영 폐기됨.(2020.9.24.) 		
향후계획 (도의회 협조사항 등)	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댐 방류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건의		
진 도	완 료	추 진 중	○